

“서울 시내 초중고 113곳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

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친일잔재 조사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조연희 지부장(왼쪽)과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서울 학교 내 친일잔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초중고 113개교에서 친일파가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의 동상 등 기념물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학교 내 친일잔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가 작사 혹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8개교, 공립중학교 10개교,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 85개교 등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교가 작사·작곡가는 김동진, 김성태, 이광수, 이흥렬 등 총 13명이었다. 이흥렬은 27개교, 김성태와 김동진은 각각 19개교의 교사를 작사 또는 작곡했다. 이광수가 작사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는 4개교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의 동상 등 기념물이 있는 학교도 있었다. 국민총력동원조선연맹 이사, 조선방송협회 평의원 등 친일단체 간부들 역시 동상 등 기념물 관련 조사를 받았다.

던 인촌 김성수는 고려대와 중앙고에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인촌기념관 등의 건물이 명명돼 있었다.

최근 이사장과 교장 등이 55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휘문고와 휘문중도 한일 합병 지지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희의 동상이 있었다.

영훈초 영훈중 영훈고 설립자인 김영훈은 친일인명사전에 고위 친일 관료이지만 학교 교정과 건물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조사는 학교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친일잔재가 남아있다고 파악한 113개교 중 사립은 64.6%인 73개교, 공립은 40개교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교육계 친일 잔재에 대한 엄밀한 전수조사와 친일잔재 청산 작업에 함께 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나라를 되찾은 지 70여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 시내에 100여곳이 훨씬 넘는 곳에서 친일의 망령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면서 “교과, 교목, 기념비, 기념식수, 표지석 등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를 위해 엄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7개 치킨업체, 나무젓가락·비닐봉투 줄이기

1회용 배달용품 사용 단계적 감축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닭고기 튀김(프라이드 치킨) 1회용 배달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7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시민단체인 녹색미래, 그리고 서울시가 협약에 참여한다.

7개사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칸부(칸부치킨), 비에이치씨(bhc치킨), 원우푸드(치킨뱅이), 제너시스 비비큐(bbq치킨), 지앤푸드(굽네치킨), 헤인식품(네네치킨) 등이다.

협약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한다. 또 소속 가맹점 교육·홍보를 통해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녹색미래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실천포스터 제작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규제 수단이 없어 배달 업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안하기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업무협약이 계기가 돼 모든 외식배달업체의 참여와 시민들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사례집’ 발간

“임대차 분쟁 예방”... 1만7천건 중 대표사례 108건 뽑아 수록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담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총 1만 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됐다. 핵심 주제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17건 ▲계약해지 17건 ▲임대차기간 15건 ▲임대료 조정 15건

▲관리금관련 21건 ▲수리비와 관리비 9건 ▲원상회복 6건 ▲중개보수 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사례집에는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담겼다.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관리금계약서’ 내용 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포함됐다.

이울러 관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

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 10건도 소개한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종 國葬 재현 논란에 “국장 있어서 3·1운동 가능”

서울시는 26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중 고종 國葬(國葬) 재현행사 논란과 관련, “고종의 국장이 있어서 민세운동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서해성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종의 죽음이 있었고 그때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을 위한 합법적 공간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서 총감독은 “그날 추모객이 많

이 왔다. 추모객들이 남대문역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민세운동이 가능했다”며 “왜 그들이 덕수궁으로 시위대가 진출했을까.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상이라는 분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모를 항쟁으로 바꿔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추모는 왕에 대한 직접적인 추모도 있었지만, 국권 소멸에 대한 불인정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항쟁적



수궁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고종 國葬 재현 행사 “100년만의 국장”을 덕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